

제3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2005년 3월 12일 (토) 오후 3시
풍문여고 강당

자료집 순서

- 정기총회 진행순서

- 2004년 사업보고 4p
사업 총괄보고
활동기구별 사업보고

- 2004년 감사보고 28p
회계감사 보고

- 안건 I. 2005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30p
회원사업 계획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부설기관 사업계획

- 안건 II. 결산 및 2005년 예산안 승인의 건 45p
2004년 결산보고
2005년 예산안

- 안건 III. 2005년 임원인선안 승인의 건 49p

- 안건 IV.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52p

- [부록] 희망과 비전 보고서(2004.9) 60p
- 참여연대 기구표 72p

보고 1. 2004년 사업보고

2004년 참여연대 사업 총괄 보고

1. 2004년 주요활동

○2004총선 낙선운동 및 탄핵반대 시민행동

- 2004 총선시민연대 구성하여 낙천낙선 리스트 발표
-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탄핵반대국민행동’ 활동에 참여
- 총선 정국이 탄핵/탄핵반대 이슈로 형성되어 2000년 낙선운동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함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운동

- 2004년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활동에 참여
-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역할을 함

○국회감시사이트 구축 및 국정감사 집중 모니터

- 국회감시 싸이트 ‘열러라 국회’ 구축 및 정기국회 국정감사 집중 모니터
- 국회와 국회의원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의정감시운동의 기반 구축

○사법감시 이슈리포트 발간

- 매호 단일한 주제의 이슈리포트 형식으로 기존 「사법감시」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
- ‘전직 고위법관 개업실태 분석결과’등 파급력 있는 이슈 제기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모니터

- 대법관 제청절차, 시민의 사법참여,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및 국방외교 현안 모니터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활동에 참여
- 북핵문제, 한미동맹 재편 등 외교 현안들을 모니터하고 ‘북핵정보자료실’ 구축
- KMH(한국형다목적헬기)등 무기사업 감시 본격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 북한인권법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인권운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

○아시아 연대 중심의 새로운 국제연대 사업 모색

- 버마 등 아시아의 민주화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연대 사업 준비

- 유엔 협의체(ECOSOC) 자격 취득을 계기로 유엔을 활용한 사업을 시도

○이해충돌 해소와 공직윤리 규범 확립을 위한 시민행동

-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및 입법운동
- 고위공직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모니터

○공공기록물 관리실태 모니터

-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정부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연재 보도
-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로 정부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단 구성을 이끌어냄

○재벌기업의 부당 행위 모니터

-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는 사실 등 현안을 발굴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 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법 개정의 방향 도출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LG카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대주주 일가 형사 고발
-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재벌총수들 형사 고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운동의 진전

- 불법정치자금 과세 캠페인으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이루어냄

○개인회생제도 운용 모니터 및 신용불량제도 폐지 운동

-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실태 모니터 및 시행지침의 개선 추진
- 정기국회 법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제도가 폐지되는 성과를 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 up’ 캠페인 전개

- 하월곡동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 진행
- 빈곤실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과 최저생계비 부분 인상에 기여함

○참여연대 10주년 기념사업 진행

- 참여연대 10주년 백서 발간, 시민한마당 등 다양한 기념사업 진행
- 10주년 희망과비전위원회에서 ‘참여연대 10년 평가 및 전망’ 보고서 제출

2. 2004년 사업 약평

○ 탄핵, 파병, 국가보안법 등 사회적으로 대형 이슈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연대활동이 활발했던 반면, 참여연대 고유사업은 다소 정체되었음

○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모니터 싸이트를 개설하여 국회 및 국회의원 감시 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으나, 내용 면에서는 부족함. 대중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함

- 사법감시센터는 이슈리포트 발간, 사법개혁 논의 모니터 등을 통해 모니터 기구로서의 일상적 활동력을 복원함
- 반부패 영역에서 공공기록물 관련 사업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가져오는 제도적 성과를 남김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윤리법 이행실태 모니터는 시의적절한 현안대응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면에서는 부족했음
- 경제개혁센터의 경우 재벌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는 안착되어 이슈 발굴 및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정부의 재벌·금융정책에서는 경기침체 상황을 악용하여 개혁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체계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였음
- 집중사업으로 전개한 불법정치자금 과세 캠페인이 관련 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다른 조세개혁 이슈들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함
-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 파병반대 연대사업 및 각종 국방외교현안 모니터를 통해 짧은 시기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중심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짐
- 민생분야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에 관한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해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낳았으며, 신용불량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냄
- 사회복지위원회의 하월곡동 최저생계비 체험 캠페인으로 빈곤실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도개혁의 기반을 구축함. 특히 체험 방식의 새로운 접근은 논평과 입법운동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는 참여연대 운동방식을 확장시킴
- 탄핵, 파병, 국가보안법, 과거청산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등 주요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대사업에 주도적으로 결합하여 시민사회운동 연대의 중심단체로서 입지와 위상을 확고히 함
- 제도개혁 및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로비, 모니터, 토론회, 논평 등으로 운동 방식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음. 새로운 행동양식 개발에 관한 다양한 검토와 실험이 필요함
- 조직사업에 있어서는 2004년 실질 회원증가 600명 미만, 회비감소 등 양적성장이 둔화하는 추세. 경기침체, 참여연대 사업정체 등 시기적, 주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나,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함. 특히 정치참여운동, 자발적인 네티즌운동 등 시민참여 및 시민행동의 주체와 경로,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운동양식을 모색하여야 함

- 경제개혁센터와 사회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기구에서 실행위원회 체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조직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신규 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발굴 및 조직화가 모든 활동기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3. 기구 개편

- 부설기관인 시민과학센터가 2004년 8월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회, 11월 21일 시민과학센터 총회를 거쳐 참여연대에서 독립, 연구소 형태로 활동을 유지하기로 함.

4. 2005년 활동방향

- 한 단계 심화된 권력감시 운동으로의 도약 및 전문성 강화
- 평화운동의 전문화 및 북핵 등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소를 위한 연대 강화
- 빈곤철폐, 분배정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사회구조 개혁운동의 본격화
- 대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발, 제도개선 중심의 운동방식 혁신
- 참여연대 새로운 10년의 발전 전략 및 조직개편 방향의 확보와 공유
- 회원확대의 정체상황 극복, 회원참여의 방식 및 구조의 혁신

2004년 회원사업 보고

1. 2004년 총평

- 다양한 회원참여 공간 마련
 - 지역회원한마당, 지역회원커뮤니티 결성, 지역회원 순회인터뷰, 토요일신입회원한마당 등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
 - 회원 대토론회, 시민한마당, 회원대설문 등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회원들과 함께 10주년을 되새기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
 - 하반기부터 의정감시센터와 함께 국회의원 297명 맨투맨 감시단 조직
 - 총회, 회원한마당, 회원특강, 평화기행, 시민운동공부모임, 송년회 등 다양한 일상적인 회원행사 진행
- 인터넷 회원마당(<http://member.peoplepower21.org>) 개선
 - 회원마당 독자 콘텐츠를 운영하고, 홍보기능과 각종 게시판을 활성화함.
 - 사이버폴, 시민참여팀 활동 공유, 운영위 회의록 공개, 각 활동부서와 사무처장에게 이메일 보내기 등 회원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강의록과 동영상 올리기, 시민운동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교육 활성화

- 회원마당 개선으로 조회 및 방문 건수 등이 눈에 띄게 증가. 단, 클럽투게더(인터넷 동호회 기능)는 분위기와 기능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침

○ 회원 행동 조직

-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연대 유권자위원회 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 회원들 적극 참여.
- 참여연대 회원들의 일상적인 실천프로그램(회원 캠페인)은 진행하지 못함.

○ 회비 대책 실행

- 3월 이후 회비가 감소함에 따라 회원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회원확대 캠페인과 전화 작업을 전개함. 특히 희망일구미 자원활동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회비가 연초 수준으로 회복

2. 주요 회원활동 일지

○ 신입회원 한마당

- 매월 신입회원한마당 개최, 신입회원과 기존 회원, 자원활동가 참여
- 3월, 6월, 10월에는 평일 참석이 불가능한 신입회원을 위하여 토요일 신입회원한마당 개최

○ 지역회원 한마당

- 부산,경남지역 : 6월 19일(토) 부산민주공원 중강당
- 대전,충남지역 : 9월 18일(토) CBS 대전방송국 소강당
- 광주,전남지역 회원 : 11월 13일(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시민운동공부모임 주최 강연

- 1월 <통일에 대하여, 언론에 대하여>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 2월 <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기> 홍석인 의정감시센터 간사
- 3월 <친일진상규명, 왜 안되고 있는가>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 4월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생태적) 대안> 이필렬 방통대 교수
- 5월 <쌀문제, 농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응두 정책위원장
- 6월 <한국사회, 비평과 전망> 홍세화 前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 7월 <국민연금을 해부한다> 남찬섭 서울신학대 교수
- 8월 <백지신탁-고비처등 반부패정책현안> 윤태범 교수
- 9월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10월 <대안연대에게 들어보는 한국경제이야기> 이홍균 교수
- 11월 <한국종교의 현실> 윤이흠 서울대 교수
- 12월 <여성운동의 현황과 미래> 윤정숙 여성민우회 대표

○ 회원한마당 및 기타 참여행사 등

- 1월 <왜 다시 낙선운동인가> 김기식 사무처장
- 2월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평화기행
- 3월 정기총회
- 4월 도봉산 봄산행
- 5월 봄답사 5/22~23, 5·18묘역-송광사-조계산-선암사-운주사코스
- 6월 1차 회원대토론회, 6·10항쟁기념 달리기대회 참여
- 7월 북촌기행
- 8월 <한국경제의 전망 및 개혁방향> 장하성 교수
- 9월 <국가보안법에 대한 긴급 강연 및 토론> 장경욱 변호사
- 10월 <과거청산, 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김동춘 교수
- 10월 16일 창립10주년 기념 시민한마당 서울시청앞
- 11월 DMZ평화기행
- 12월 송년회

○ 회원특강

- 4월 <2004년 미국(대선)이야기, 한국(총선)이야기> 김동춘 교수
- 5월 <진보정당과 정치개혁>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 7월 <아파트분양가, 어떻게 하락시킬것인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
- 11월 <헌법과 헌법재판소> 임지봉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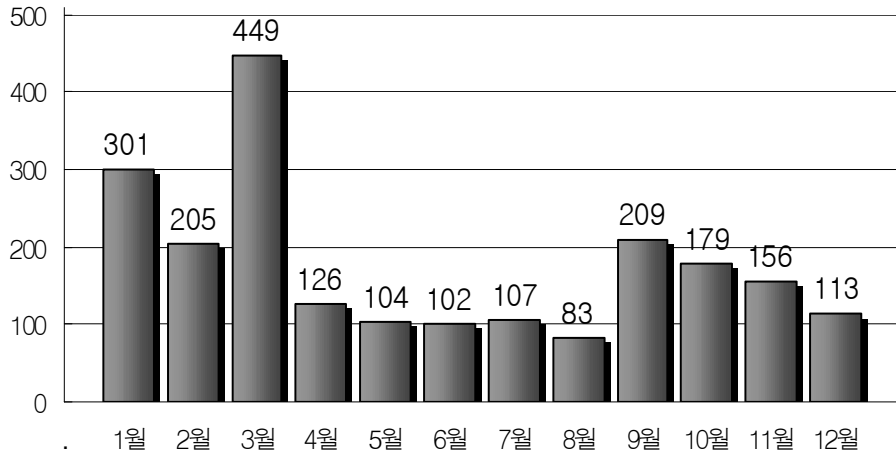
○ 10주년 맞이 회원대토론회

- 6월 30일 회원대토론회 1 <참여연대 운동에 대하여>
- 7월 30일 회원대토론회 2 <참여연대 운영개선 및 회원참여활성화방안>
- 10월 5일 회원모임과의 대화 <희망과 비전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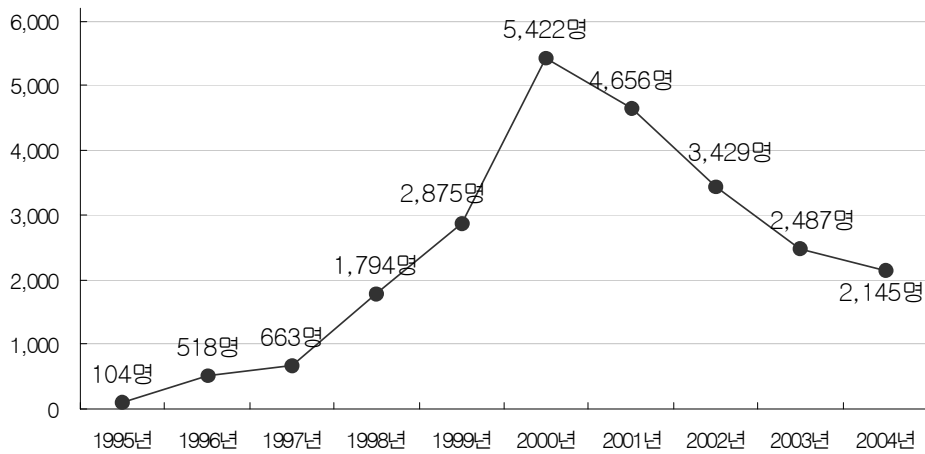
3. 회원 현황

○ 2004년 12월말 현재 회원 수 : 13,193명

[도표 1] 2004년 월별 가입회원수
회원수(명)



[도표 2] 연도별 가입 회원수
회원수(명)



2004년 활동기구별 사업 보고

의정감시센터

1. 총평

- 상반기 총선, 탄핵 국면에서 연대기구에 결합하여 중심적 역할 수행
-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 등 정치제도개혁에 상당한 성과 도출
- 국회의원 의정감시 전문사이트 개발로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국회 모니터 시스템 구축.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의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은 다소 미흡
- 실행위원진의 일부 교체 및 확대, 4기 실행위원회의 안정화는 미흡

2. 주요 사업

1) 총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연대활동

- 2004총선연대 결성 및 낙선운동 진행
 - 전국 453여개 단체 참가, 낙선대상자 206명의 낙선대상자 발표, 129명 실제 낙선함
 - 총선연대는 이와 함께 정치3악(부패정치, 지역감정, 돈선거) 등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추방하기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음
 - 탄핵국면으로 인해 낙선운동 그 자체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음
-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결성 및 중심적 활동 전개
 - 전국 972개 단체 참가, 6월 항쟁이래 최대규모의 연대기구 결성
 - 연인원 100만명 이상 촛불시위 참여

2) 정치자금법의 전면 개정 등 정치제도개혁 실현

- 정치자금법 전면개정
 - 2003년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연대 활동, 2004년 국회의장 산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결합하여 정치개혁안 논의 주도
 -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전면개정, 선거법 일부 개정 등 정치제도개혁의 상당한 성과 도출

3) 의정활동 모니터 사업

- '열려라 국회' 사이트 개설
 - 국내 최초로 국회의원 감시 전문사이트 런칭
 -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국회 모니터 시스템 구축
- 정치인기본정보 <기본경력, 검직현황, 병역, 재산, 당적이동, 전과등>
17대의정활동 <본회의·상임위 출석현황, 법안발의, 상임위 활동, 개혁법안에 대한 태도>
특이경력 <재판현황, 비리혐의 등 특이사항> 등을 수록함

○ 17대 첫 정기국회 대응

- 정기국회 과정에서 각 부서와 협조하여 ‘개혁과제 발표→현장모니터→일일 모니터 보고서 발표’
- 개혁과제 처리에 대한 상임위원회 종합모니터를 진행했으나 의원 개인에 대한 예각적 평가는 미흡하였음

○ 국회 이슈리포트 발행

- 법사위 상원논란, 윤리특위 개혁문제, 소위원회 회의 공개 현황 및 문제점, 17대 국회 개원이후 의안처리 현황 평가, 정치보도의 문제점,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 총 7회에 걸쳐 ‘이슈리포트’ 발행

사법감시센터

1. 총평

○ 상반기, 지원사업 및 현안대응 위주 사업으로 한계 노출

- 2004년 상반기동안 총선연대 사업 지원 및 집시법 재개정 연대사업 등을 추진, 사법감시센터 독자사업 진행 미흡
- 기타 현안 대응 위주로 사업이 진행됨 (인사청문회, 사법개혁위원회 모니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응 등)

○ 하반기, 실무 간사 증원됨에 따라 사업의 다각화 및 예각화 가능해짐

- 고비처 쟁점 토론회, 현재 수도이전 위헌결정 긴급 토론회, 사개위 활동 평가 토론회 등을 통한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사법감시지를 ‘이슈리포트’ 형식으로 변경, 효과적인 이슈제기 방식으로 자리잡음
- 다만, 기획사업으로 제기된 법조윤리 관련 사업 등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함

2. 주요 사업

○ 상반기

- 총선연대 사업 지원 및 집시법 재개정 연대사업에 역량 집중
-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모니터
- 6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촉구 및 7월 쟁점 토론
-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모니터 및 의견서 발표 :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시민의 사법참여,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서 전달
- 7월 대법관 후보자 추천 (환경련, 녹색연합, 여연, 참여연대 공동추천)

○ 하반기

-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활동
- 8~9월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논란 대응 : 로스쿨 도입 촉구

- 9, 10월 사법감시지 21호, 22호 발행
- 10월 헌법재판소 수도이전 위헌결정 대응 : 긴급 토론회 민변 공동개최 및 대중사업
- 11~12월 춘천법조비리 등 법조윤리 관련 사업 진행 : 사개위에 의견서 전달 포함
- 12월 사개위 평가 및 향후 사법개혁 과제 검토 : 토론회 개최 등

경제개혁센터

1. 총평

-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계의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97년 외환 위기 이후 추진된 개혁정책들이 위기에 처함. 공정거래법 증권집단소송법 등의 개악을 저지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
- 기업 살리기, 재벌기업의 M&A 위협 등 재계의 이태올로기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의 전기를 마련해야 함
- 개별 기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만족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많지 않음

2. 주요 사업

1) 개혁입법 후퇴

- 정부와 국회 모두 개혁입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참여연대와 재계의 정면대결 양상이 계속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후퇴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조차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고, 집단소송법도 결국 2년 유예되는 상황

2) 기업 관련 현안

-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삼성카드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문제를 제기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킴
- LG카드 대주주의 내부자 거래, 삼성생명의 계열사 불법 대출, SK네트웍스의 공시의무 불이행 등 개별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이나 사법부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 중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기를 맞고 있음

조세개혁센터

1. 총평

- 2004년도에는 새로운 세제개혁 과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불법정치자금 과세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와 각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 수준에서 대응함.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가 다른 이슈들을 모두 잠재우는 효과를 낳은 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조적인 세제개혁 과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2. 주요 사업

1) 불법정치자금 과세캠페인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과세 촉구 운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문화하는 성과를 낳았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여야 담합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일부 개약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음

2) 보유세 개편

- 재산세 비교 캠페인, 위헌소송 등을 통해 자산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함. 구체적인 법 개정 과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모니터하는 수준에서 대응함

3)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선 운동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개혁과제를 선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활성화되지 못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총평

-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던 사업들 대부분은 무리없이 진행. 행정개혁운동을 위한 사업내용 준비와 조직화는 미진
- 기록물사업과 정보공개사업의 사업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획사업 발굴이 요구됨
-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은 무난하게 이뤄짐

2. 주요 사업

1)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 및 제도개선운동

-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
-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개별쟁점과 관련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함
- 본격적인 법안 심사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체적 사례 및 근거, 법률적 논리 개발 등이 부족했던 원인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모니터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퇴직후 취업제한 모니터 사업 등은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

- 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통해 인사 조치 등을 끌어내지는 못함
 - 부방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극적 권한행사와 법률해석의 문제점, 정무직 공무원의 정계실효성 확보, 비위면직자취업제한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임
- 2)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모니터
- 선도적인 문제제기, 적절한 개입과 대응이 이뤄짐으로써 언론 및 국회의 관심을 촉발하고, 정부차원에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시스템 개선단이 조직될 정도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선에 기여
 - 그동안의 기록물 관리 개선운동이 기록관리에 있어 통제 및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면 향후에는 국민들의 기록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기록공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라는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
- 기존 사건에 대한 추가대응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음
 - 반면 제보의 절대적 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제보처리의 어려움도 증가함

사회복지위원회

1. 총평

- 희망UP 캠페인을 통해 빈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시도
-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은 부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집중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2. 주요 사업

1) 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

-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 최저생계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 폭 넓힘
 - 정책 제안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활동을 벌임
 -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다양한 사업 벌임
 -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으로 애초 목표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함
- 분배구조 개혁 운동
 - 사회○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 6월 분배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분야의 총괄적인 정책과제를 발표함
 - 언론사 공동기획 등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2) 10주년 기념행사 및 백서 발행

- 사회복지위원회 10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움 개최, 백서 발간
- 평가에 치중하여 향후 복지운동의 10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한계를 가짐

3) 복지 제도 개혁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연초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개선과제를 남김
 - 11월 이후 2차 개정운동을 벌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함
-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법 개악안 저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시도함
 -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복지재정 분권화 대응
 - 상반기 복지 분야 재정분권화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
 - 지속적인 대응을 벌이지 못하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함

4) 사회권 사업

-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을 다루었으나 노동관련 연대사업 중심이었다는 한계를 보임
- 분배구조 악화의 핵심적 문제인 비정규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한 사업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총평

- 서민금융 분야에 집중하여 개인회생제도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 제시
- 집중사업 분야였던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사안별 대응에 그침

2. 주요 사업

1) 서민금융 분야

-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대법원시행규칙 개정 등 일정한 성과를 가져옴
- 신용불량자문제와 관련 지속적인 입장표명 및 신용불량제도 폐지를 위한 법개정 추진
-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청원시기를 놓치는 등 사업의 주도성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점이 지적됨

2) 프라이버시 분야

- 집중 사업 분야로 설정하였으나 사안별 대응을 넘어서지 못함

- 유전자정보와 관련해서 꾸준한 정책적 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KTF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응함

3) 제도개선 운동

- ‘폭리제한법’, ‘신용소비자보호법’, ‘파산법’ 등 서민금융 분야의 관련법제 청원
- 시의성을 갖지 못하고, 구체적인 입법 운동 전략을 펼치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4) 기타

- 3월 고속도로 폭설 대란, 7월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문제 지적, 8월 PPA 감기약 사태 등 서민생활의 권리문제에 대응
- 대부분 단발성 이슈대응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함.

평화군축센터

1. 총평

- 주요 평화이슈에 대한 일상적 대응력 확보와 평화연대 활동의 중심축 역할
- 대안 담론 제시 및 기획 사업을 통한 개입력 확보 미흡
- 인적 역량 강화, 회원확대 및 재정자립 등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확보에는 미흡

2. 주요 사업

1) 이라크파병반대운동

- 대중적 평화운동으로 반전평화운동의 토대 마련
- 각종 보고서 발간, 논평 등의 정책사업과 대국회 로비 집중
- 형해화된 연대체 운동, 관성적 집회방식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

2) 북핵모니터

- 북핵사이트 개설을 통한 일상적 모니터와 자료축적에 집중

3) 주한미군재배치 모니터

- 주한미군재배치(용산, LPP,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한 모니터, 논평, 국회대응에 집중.
- 주도적 현안대응보다 협상결과에 따른 후속대응 중심

4) 국방정책 모니터

-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재검토 결정은 초기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가능
- 추가 의제 발굴, 관련 전문가 확보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모니터 시스템 구축에는 미흡

5) 북 인권 모니터

- 북한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평화인권단체들과 공동 대응, 공동보고서 작업 진행
-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여연대 입장 전달

6)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남북관계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발표, 토론회 개최, 의견청원 등 시의적절한 대응
- 사회적 공론화나 대북정책기구에 대한 구상은 미흡

국제연대위원회

1. 총평

-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 강화와 관련하여 반부패-권력감시, 평화, 빈곤의 3분야 중 반전평화 부분만 안정적으로 진행
- 각 부서의 국제연대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국내외 훈련프로그램 개발 미진
- 일상 홍보사업의 전반적 담보
- 당초 계획했던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국제연대 운동 모색은 희망과비전위원회의 논의 결과 유보됨
- 국제연대 전략 간담회를 진행하며 10주년 즈음한 장기 국제연대 논의 진행 중

2. 주요 사업

1) 미흡한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

- 아시아 선거의 해로 불린 2004년 아시아 정치 개혁과 권력 감시 국제 워크숍 기획 후 아시아 권력네트워크 시도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유보
- 아시아평화연대, 자카르타와 베이루트 평화회의네트워크와 교류, 국제 반전평화 연대 적극 참여
- 버마 민주화 지원과 관련한 국제회의 참가 후 버마 지원 한국시민사회연대모임 참여

2) 국제연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력 강화와 재정 마련 필요

- 각 부서 국제연대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발굴 미흡
- 2005년부터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국제화 논의 지원과 더불어 해외출장 지원 기금 확보를 위한 재정 기획 필요

3) 일상 홍보 활동 담보

- 웹사이트의 영문컨텐츠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업무 과중, 자원활동그룹 해체와 재구성 작업 소홀로 최소한의 기사 게재로 그침
- 재정 사정으로 계간지 ASQ(Asia Solidarity Quarterly)를 대체하는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세계 분쟁과 평화운동」 책자 호평

2004년 연대사업 보고

1. 2004 사업방향과 기조

-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
- 낙선운동 중심 총선연대 형성(총선)
-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범국민적 연대 형성
- 노동 농민 공공부문 세계화 등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 정리
- 분배구조 악화와 마이너리티 이슈에 대한 연대 활성화
- 국가보안법, 집시법, 테러방지법 등 인권침해 법률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역연대 전망 마련(참여연대 10주년, 지역분권 자치 제도 신설)
- 10주년에 따른 연대사업 전략 마련(10주년)
- 잇따른 연대기구의 형해화에 대해 새로운 연대방법론의 정립

2. 2004 주요 연대사업

1) 총선연대와 탄핵반대

- 2000년에 이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정치권 전체의 부패상이 드러난 2003년까지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시민행동이었음
- 그러나 낙선을 63%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낙선운동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는 1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2) 파병반대국민행동

- 2003년 이래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적극 결합, 정책담당 활동. 전체적으로 결합은 양호
- 김선일 씨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파병저지에는 실패. 관성적인 집회의 반복, 파병불가피론 같은 패배감으로 동력 위축. 파병연장 반대운동은 국보법 폐지운동 등 다른 개혁과제가 부각되자 주변화됨

3) 한반도 위기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연대

- ‘해방-분단 60년’을 남과 북이 능동적으로 맞이하자는 취지로 8.15 전후 사회단체 연명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12월 이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행사 남측추진위원회’에 적극 결합하였음
- 남북교류 사업에 주요 주체로 참여한 것은 참여연대 사상 처음. 평화군축센터 등 관련 활동기구의 설립, 해방 60년이라는 계기, 현 시기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고루 반영한 것임

4) 민주주의 : 국보법, 테러방지법, 집시법

- 국보법은 연대기구 제출법 이후 적극적 결합하였고 하반기 핵심 연대사안으로 부각됨. 시민감시국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연대
- 테러방지법은 16개 국회입법을 막았으나 김선일씨 사건 등을 계기로 각 당이 새 국회에 수정된 법안제출을 준비 중
- 집시법 개정은 연대기구에 결합하였으나 주동성과 역동성이 떨어졌고 새 국회 출범이후 국보법 등에 의해 주변화됨

5) 분배구조 악화와 마이너리티

- 사회인권팀 중심으로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사안에 능동적 연대
- 외국인노동자 추방, 차별철폐 관련 연대사업에 사회인권팀 중심으로 적극 참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 정책실 중심으로 적극적 입장 개진

6) 분권 분산 자치 균형발전 관련

-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주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도시 육성 등 개발주의적 구상의 한 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되는데 비판적 문제제기”를 결의하고 성명서 발표
- 현재의 ‘관습헌법’ 판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전제로 내놓았던 개발공약 등을 비판하는 입장 개진
- 주민소송제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대응. 국회 소위 논의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계획 부재로 일부 개악을 막지 못함

7) 노동 농민 공공부문 세계화 등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 정리

- 세계화 관련 사업은 희망과비전위 평가전략소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검토했으나, 관련 사업 담당주체 미비와 적절한 사업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유보됨
-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쌀협상에 대한 입장 및 식량지급을 법제화 등에 대한 적극적 입장 정리를 시도함. 그러나 지속성을 갖고 대응하지는 못함
- 전체적으로 민중연대 사안을 사회인권팀 등과 나누고 있음에도 연대사업 담당 인력(정책실 인력)부족이 대응위주의 사업에 머물게 하고 있음

8) 지역공동체와 참여자치연대

- 10주년을 계기로 전망논의 지속
- 참여자치지역연대, 공동체 등과의 현재 관계 유지하고 다소 모호하더라도 운영 유연성 발휘기로 함
- 지역정치 참여를 위한 공동체 규약의 완하나 폐지는 신중히 하기로 함
- 의정부는 경기북부 참여연대로 명칭 및 활동범위를 변경하여 준 광역화 함
- 한편, 하반기 이후 ‘참여자치지역연대 공동정체성 및 전국적 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워크숍, 기획단 구성등 진행됨. 참여연대 공동체들 역시 소속단체로서 이 논의에 적극 결합하고 있음

- 이 논의는 협의적 구조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연대의 연대 수준을 보다 폭넓은 연합적 질로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9) 환경, 생명, 문화

- 부안 방폐장, 부안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

10) 기타

- 언론개혁 국민행동 참여 2004. 6 연개련 소속으로 자동 참여, 명의 연대 수준
-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도박산업 규제 법제 마련에 동참. 도박산업규제 패키지 입법안 추진 중
- 의문사 진상규명위 사건 입장발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를 거쳐 올바른과거사청산범국민위에 결합하였음.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명의 연대 수준 결합

11) 10주년에 따른 연대사업 전략마련

- 백서 작업을 중심으로 10년간 연대사업 현황과 특징 정리
- 평가전략소위에서 참여연대 운동의 변화된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조직발전 방향의 대강을 전망하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함
- 다만, 연대사업과 관련된 변화된 환경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전략을 마련하는데는 한계를 보임
-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체에 대한 입장 △민중단체들과의 장기적인 개혁적 연대발전 방향과 전략 △민노당 원내진출에 따른 변화와 대처방향 △연대체운동의 관성화에 대한 개선방향 △최근 연대사업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내용적, 형식적) 들에 대한 탐구와 능동적 대책마련이 미흡했음.
- 연대사업 내부 주체 정비방안 등도 논의 미진

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작년에 이어 현상유지적 활동에 그침
- 제주도 전국시민운동가대회,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청사건 프로젝트 지원, 회원관리워크숍,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한 의견서,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논쟁에 대한 입장 발표 등 일상활동 위주이며 활력도 없고 있음

3. 2004년 연대활동 총평

○ 주요 연대 방향과 기조 대체로 유지

- 정치개혁-탄핵과 낙선운동, 파병반대, 국보법 개폐 등 시기별 집중과제에는 적극 연대하여 주도적 역할 수행
-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 최저임금 등 분배구조 개선 및 노동-복지 관련 주요 연대과제에서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연대
- 기타 농민-쌀협상, 환경-방폐장, 도박장 규제, 과거사, 자치-분권 등 사안별 현안에 최소한의 연대활동 전개
- 분배구조 개선-사회적협약, 지역연대 등 전략적 연대과제 의제화

- 연대 활동의 기본틀에 대한 포괄적 개선 논의 시급
 - 개혁과제는 넘쳐나는 반면, 시민운동 동력은 분산 축소되는 현상
 - 시민단체 각 부문 과제가 분출하고 있으나 힘이 분산되고 역량도 위축되는 현상
 - 분권화에 따른 개혁의제의 지역화, 지역의제의 전국화
 - 시민단체 외 참여정치단체, 네티즌 등 시민행동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 등
 - 기타 관성적 연대체 운동의 한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연대활동 방향 마련이 시급

○ 주된 평가 및 향후 논의과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침체 극복과 개혁주체 형성
- 참여자치지역연대의 확대강화와 참여연대의 역할 확대
-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민중-시민단체간 건설적 논의구조의 정착
-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의 바른 관계정립
- 관성화되는 집회와 판에 박힌 상층정책 활동을 넘어설 연대방법론, 혹은 시민행동론

※ 연대사업현황(2005. 1월 현재)

○ 참여연대 공동체

- 대구·울산·경기북부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가 2004년 12월 재발족) 등 3개 단체

○ 상설 연대기구 3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한시적 연대(대책)기구 28개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공동운영위원장-정책사업단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운영위원장), 개약집시법대응연석회의,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공동간사단체), 분권과참여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MD공동대책위원회, 한국대인지뢰대책협의회, 공공부문정책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을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 지리산살리기운동본부, 반핵국민행동,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모임, 한국사회포럼, 방송법개정지지와공영방송사수를위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위, 청계천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시청앞광장되찾기시민단체회의, 2005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한국위원회, 언론개혁국민행동,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성매매방지법의올바른시행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 올바른과거사청산범국민위

○ 부서별 (주요)연대 현황

- 비정규직차별철폐공동대위(사회복지위원회), 최저임금연대(사회복지위원회),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기록물관리제도개선네트워크(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개약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법감시센터) 한반도인권회의(평화군축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및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 2004 신규 연대기구 가입 8건

- 방송법개정저지와공영방송사수를위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위, 청계천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시청앞광장되찾기시민단체회의, 2005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한국위원회, 언론개혁국민행동, 성매매방지법의올바른시행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 올바른과거사청산범국민위

○ 2004 한시 연대기구 결성 후 해소 3건

-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공동대표 및 공동운영위원장), 2004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 공동운영위원장),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집행위원장)

2004년 부설기관 활동보고

참여사회연구소

1. 총평

- 조직의 안정성 배가, 위상 강화
 - 재벌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 안정적인 포럼운영과 반년간지 발간 등으로 연구 활동 안정성 배가, 사회적 위상 강화
 - 법인 행정시스템 정비, 웹 사이트 구축과 업데이트 등으로 운영환경 개선
 - 시민사회분과 등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10주년 평가 분석
- 장기적 내실화 및 발전 전망의 취약
 - 후속 연구프로젝트의 불안정성, 이에 따른 재정압박 우려
 - 포럼과 심포지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나 담론을 넘어서는 정책의 구체성 확보 필요
 - 연구 분석기능과 참여연대 활동기능 간의 구조적 역할분담과 의사소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주요 사업

1) 포럼 및 심포지엄

- 참여사회포럼
 - 제38회(2004. 1. 27)부터 제43회(2004. 11. 12)까지 총 6회 진행
 - 17대 총선과 시민운동/ 비정규직 정책/ 탄핵과 총선, 한국 사회/ 쌀 협상과 농업의 미래/ 시장 중심적 토지 주택 정책 재검토/과거사 청산 - 시각과 방법 등 다름
 - 주요 이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은 유효하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역할은 부족
- 심포지엄
 - 상반기 심포지엄 : 2004년 5월 21일, 재벌 프로젝트 2차 발표회
 - 하반기 심포지엄 : 신행정수도 이전 및 국토 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2005년 상반기로 연기

2) 연구 프로젝트

- 재벌연구 프로젝트
 - 2차년도(2003년 8월 ~ 2004년 7월) 및 3차년도(2004년 8월 ~ 2005년 7월) 시행
 - 재벌연구 프로젝트 시행으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원을 확보하는 등 연구소의 면모를 갖추었음.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05년 8월 이후 후속프로젝트 개발이 과제

○ 재벌 혼맥도 프로젝트(2003. 12. 29 ~ 2004. 1. 11)

- 대상 : 1987년부터 2002년까지 공정위 선정 50여개 재벌 기준, 2700-3000명 대상
- 재벌과 정·관계의 전체 혼맥도 및 특정 사례 발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 삶의 질 연구 프로젝트

- 학술진흥재단에 협동연구 지원사업(1년) 신청했으나 탈락.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대형 프로젝트였던 점이 탈락사유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됨

3) 분과 활동

○ 지역정책분과

- 구성원들의 연고가 지방에 많고 개별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있어 정기모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분과장과 일부 분과원은 상반기 동안 삶의 질 프로젝트 준비에 참여

○ 시민사회분과

- ‘사회운동연구’ 진행, 이를 <시민과세계>에 적극 반영 공유함
- 참여연대 정책위원회와 2004년 참여연대 10주년 평가 토론회 준비

○ 경제분과

- 재벌프로젝트 2차 및 3차년도 연구 활동, 상반기 2차 공개발표회 수행하였음

4) 시민과 세계

○ 2004년 3월 5호, 9월 6호 출판

- 시민사회의 운동적, 이론적 쟁점을 다루는 중요한 출판물로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적·인적 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소한의 출판비용은 소액후원자들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후원이 필요함

공익법센터

1. 총평

- 집단소송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공익법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제안활동을 전개함. 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감
- 사업연수원생 연수프로그램 등 예비법률가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직하는 등 프 로보노(공익법률활동)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아직까지 센터의 조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 공익법센터 자체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한해였음.

2. 주요 사업

1) 집단소송법 입법화를 위한 활동

- 국회 입법청원과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함
-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범적인 공익소송을 진행함
폭설속 고속도로대란 소송, 패스트푸드업체의 아르바이트고용자 미지급수당고발,
불법임상실험관련 소송, 조선일보 시민단체 명예훼손 관련소송 등

2) 공익법제 도입을 위한 여론확산 활동

- 징벌적손해배상제, 납세자소송법 도입 등에 대한 기획사업 전개

3)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활동

- 사범연수원생 연수프로그램 진행, 예비법률가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참여 유도
- 변호사 공익활동 설문조사 및 현황과약 활동 전개

시민과학센터

1. 총평

- 그 동안 주력 사업이었던 생명공학감시운동에서 벗어나 창립초기의 문제의식이었던 시민 참여제도의 사회적 확산 노력
- 시민참여 제도의 사회적 확산 프로그램(합의회의) 성공적 진행
-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의 확산에 기여 (여성, 인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지난 몇 년간 끌어 왔던 조직 재정비 논의 완결
- 과학기술 쟁점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시민과학포럼’을 기획했으나 안정적으로 개최하지 못함

2. 주요 사업

1)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개최 (4월부터 10월)

- 시민참여 제도의 사회적 확산 프로그램으로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개최
-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성’ 논란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시민패널, 환경 및 원자력계 관계자, 정책 결정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했으며 향후 전력정책 결정과정 및 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계 출범에 이번 합의회의의 과정과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러 제약을 받았고 합의회의의 사회적 공론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도 있음

2)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사업

- 센터는 2001년 생명공학감시운동의 일환으로 신원확인 (미아, 범죄자) 유전자 DB 구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바 있음.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추진조직의 반발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음
- 2004년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적 검토를 요청 한 후 ‘유전자 DB 반대 네트워크’가 구성됨. 성명, 의견서 제출, 토론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 프라이버시, 여성, 인권 단체 활동가, 일부 법학자들과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성과를 얻음. 경찰 등 사업추진 기관의 관행, 법률에 영향을 미침

3) 센터 미래 논의 진행

- 2003년 8월, 2004년 2월, 2004년 8월 총 세 차례의 운영위원 엠터를 통해 센터 미래 논의 진행, 8월 운영위원 엠터(106차 운영위)에서 센터 독립(안) 준비
- 간사 총원 문제 및 젊은 활동 인력의 부족, 기존 운영위원들의 피로도 누적 등의 문제로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 증가
- 참여연대와의 결합력 강화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는 방안과 연구소 형태로 독립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끝에 연구소형태로의 조직으로 독립하기로 결정
- 시민과학센터 창립초기의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 선택. 11월 21일 시민과학센터 총회 승인

4) 좌담회, 포럼 개최

- 시민과학포럼 ‘돼지 장기 인간 이식 무엇이 문제인가?’
- 이종간 장기이식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론화
- ‘국가 과학기술연구개발 기획·평가의 문제점’ 좌담회 개최

5) 각 분과 사업

- 시민참여연구실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제도 연구 세미나 진행 (월2회)
- STS 교육위원회
- 환경교육자료집 『가치를 꿈꾸는 과학 4』 발간
- 과학기술과여성위원회
- 성별에 따른 과학기술 인식 조사
- <시민과학> 발간
- 51호, 52호 발간
- 시민과학 발간 재정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번역 프로젝트 수행

보고 2. 2004년 감사보고

2004년 회계감사 보고서

○ 회계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회계감사보고 : 서영철 감사

1. 총평

- 2004년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한 감사 결과, 일반회원 회비의 감소를 비롯한 전체적인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10주년을 맞이해 각종 행사로 인한 지출이 증가해 전년도에 비해 수익구조가 불균형한 현상을 보였다. 회비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것만이 건정한 재무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때 아쉬움으로 남는다.
-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결산 및 보고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 예산 프로그램 도입여부 등 보다 전진된 회계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2. 부문별 평가

1) 수입부문

- 회비수입은 약9억1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 감소하였고, 부정기 후원금 수입 또한 22%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회비수입이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41%로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10주년 행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수익구조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지출부문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2003년도 하반기 급여인상과 상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으나, 그 외의 지출은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줄어들었다. 10주년 행사가 많았음에도 총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자체적인 경비절감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3) 회계처리

- 회계처리 부문에 있어서는 일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복식부기의 안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복식부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총괄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과목분류 및 각 회계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겠다.

안건 I . 2005년 사업계획안 승인

회원사업 계획

활동기구별 사업 계획

- 의정감시센터
- 경제개혁센터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국제연대위원회
- 사법감시센터
- 조세개혁센터
- 사회복지위원회
- 평화군축센터

연대사업 계획

부설기관 사업 계획

- 참여사회연구소
- 공익법센터

2005년 회원사업 계획

1. 시민참여운동 기획

- 상·하반기 아카데미 형태의 시민대상 연속강좌 프로그램 진행
- 가칭 ‘시민운동연수캠프’ 형태로 시민방문 및 교육 활성화, 2005년 여름부터 진행
- 대시민캠페인 : 회원, 일반 시민, 각 회원모임, 지역회원커뮤니티의 실천 프로그램을 확정, 진행할 계획. 회원들의 광범위한 제안과 공모통해 캠페인 내용 확정 예정

2. 회원참여 활성화

- 인터넷 회원마당 지속적인 개선 추진
- 회원특강, 회원한마당, 시민운동공부모임 등 계속 진행.
- 온라인 공간 의견개선 활성화, 2006년부터는 온라인-오프라인총회 병행 추진
- 지역회원한마당 4차례개최(강원, 충북, 전북, 경북지역 순), 토요일신입회원한마당 개최 등

3. 회원전체와의 소통 확대

- 월간 참여사회, 회원전용뉴스레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 소통
- 반송우편물 제로 프로젝트, “회원님, 바뀐 정보를 알려주세요” 캠페인 계속 진행
- 문자메세지 발송 확대 : 수도권 전 지역 회원과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회원에까지 확대하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
- 총회 직후 2005년 참여연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내용을 토의하는 회원대토론회 기획, 연말 대동제 또는 회원수련회 개최할 예정

4. 재정자립대책 및 회원확대○회원정비 지속

- 지속적인 회원정비, 회비대책 진행
- “회비납부방법을 cms로 전환해주세요” 캠페인 진행
- 하반기에 회원확대캠페인 실시

2004년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의정감시센터

1. 활동 목표

- 국회, 국회의원 대상의 의정감시활동 본격화
- 국회의원DB 중심으로 ‘열려라, 국회’ 사이트 특성화, 대중화
- 국회의원 및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 감시운동 정형화
- 국회의 성실성, 전문성, 효율성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운동 등 국회개혁캠페인 전면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정감시센터 인프라 구축 (전문가, 볼런티어 그룹)

2. 주요 사업 계획

- 1) ‘2005 일하는 국회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제안’ 발표
 -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구태 10선 선정’ 등 온라인 캠페인 전개
 - 시민사회단체, 국회개혁특위, 조선연대 등과 국회개혁 캠페인 연계
 -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 제도화 추진
- 2) 국회의원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특성화, 대중화
 - DB전문 사이트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회의원 DB확대개편 등으로 특성화
 -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예각적 감시활동을 통해 의정감시 콘텐츠 풍부화
- 3) 이슈리포트 활성화
 - 국회운영과 국회의원 감시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발표
 - 국회개혁 방향과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풍부하게 담아내어 ‘현황과 대안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포트’로 자리잡도록 함
- 4) 기타 사업
 -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루는 ‘2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에 대응하여 정치관계법 대안 제출
 - 17대 국회 1년 평가사업 진행
 - 정당회계보고 및 국회의원재산신고 등 정치자금 모니터 사업 지속

사법감시센터

1. 활동 목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총력대응
 - 9월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대법관 교체를 계기로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연중기획 사업(대법관추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6년 6명의 재판관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대응 사업을 미리 준비함
- 사법개혁 방향 제시와 구체화
 - 사법개혁위원회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 진행. 개별쟁점과 추진방식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배치함
- 체계적인 모니터와 효과적인 이슈제기
 - 센터의 기획사업과 사법감시지 발행을 연계하고 시너지효과를 추구함
 - 판결모니터 범위를 확장하고 통상적인 논평과 같은 판결비평에 그치지 않는 심화된 판결비평문 작성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과 감시의 수준을 높임
 -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만들기’를 모토로 기획사업을 배치하여 법원 검찰의 제도 관행의 개선 및 법률개폐를 이끌어냄

2. 주요 사업 계획

- 1)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개혁 분야
 - 바람직한 대법관 및 헌재재판관 추천운동
 - 후보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후보검증
 - 바람직한 최고법원 구성을 위한 기획사업 전개
- 2) 사법제도개혁운동 지속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및 대응
 - 새로운 사법개혁과제 검토 및 선정
- 3) 사건 및 법조인 모니터 활동 강화
 - 판결 모니터 및 축적과 비평활동 강화
 - 법원, 검찰의 구체적 인사이동 및 인사관행 모니터
 - 판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법조인 자료실 구축, 기존 오프라인 자료실 대체
- 4) 사법감시지 발행
 - 사법모니터 전문지로서의 위상 정립 및 안정화를 도모
 - 특정주제에 대한 모니터지로서의 이슈리포트 발행지속
 - 사법감시지 발행 및 우편배포를 위한 재정확충
- 5) 주요 법개정 및 제정 추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관련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개정관련 법률안, 법조윤리관련 변

호사법 개정 법률안 등 주요 관련 법률의 제·개정 과정 모니터 및 법안 통과 촉구활동

경제개혁센터

1. 활동목표

- 재계의 반개혁 공세에 맞서 2단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
- 장기화된 기업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모니터 대상 확대
- 중소기업 관련 사업 등 새로운 사업 영역 검토

2. 주요 사업 계획

1) 기업 현안

- 삼성 관련
 -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 매각 이후 삼성전자의 추가부담 문제
 -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추가 출자 문제
 -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여부 및 정부 조치
 -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 형사재판
- SK 관련
 - SK텔레콤의 SK C&C 아웃소싱 재계약 문제
 - SK(주) 주주대표소송 추진
- 한화 관련
 -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수사 모니터
 -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 문제

2) 법제도 개선

- 2단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입법 추진
 - 1단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도입된 제도들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과제
 -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사외이사제도 확대 등
- 채벌·금융개혁 관련 법제도 개선
 - 재계의 증권집단소송제도 무력화 시도 저지, 증권집단소송법 개선 추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3) 신규 사업 검토

- 민영화된 공기업 평가
 -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사례 평가
 - 공기업평가단 구성하여 포스코, KT, 은행 등 대표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평가
- 중소기업 지원 사업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모니터
-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

조세개혁센터

1. 활동목표

-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술한 법제도 때문에 탈루되는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형평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의 철저한 과세와 관련 세제 개선 추진
- 보유세 개편, 감세 정책 등 정부와 국회의 세제 정책 모니터

2. 주요 사업 계획

1) 탈세 모니터

-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에 대한 탈세제보와 과세 모니터
- 변칙 상속·증여 모니터
 - 신중유가증권이나 비상장기업의 우회등록 등을 통한 변칙상속·증여 모니터 및 과세 촉구
- 정책과제 : 합리적인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개발

2) 불합리한 세제 감면제도 개선

- 기부금 제도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제 감면 규정 전면 재검토
-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하는 각종 감면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대응

3)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 조세쇼핑 방지 협약 등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정책대안 개발

4)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혁 과제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차명거래 금지,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의제로 추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활동목표

- 반부패분야의 “제도의 이행실태 모니터, 부분적 도입에 그친 제도의 완성,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몇몇 과제의 입법화”는 여전히 운동 과제로서 유효함. 공직윤리강화,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내부고발자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 도입을 둘러싼 세부적 논쟁에 대응하거나, 입법로비활동, 제도의 안착을 위한 모니터 활동, 이슈 발굴, 대응 등의 기본활동은 지속
- 주민감사청구제 확대, 납세자소송법, 주민소환제 도입 등의 과제는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통제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강화, 나아가 행정예의 시민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시민사회의 이슈로 남아있음. 이와 관련한 개입과 활동폭을 넓혀 나감
- 행정개혁운동은 기존운동단체, 정부혁신위원회 활동과의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행정분야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시민운동이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 기존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배치하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향후 사업방향 및 사업가능성을 타진

2. 주요 사업 계획

1) 밀실행정, 비밀주의, 비공개 관행 개선

- 비밀분류 및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 마련
 - 행정기관의 비밀주의, 비공개 관행으로 인한 알권리 침해, 행정에 대한 외부감시의 실효성 저하
 - 비공개 기록으로 지정되면 30년 동안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됨. 특히 비밀의 경우, 분류순간 공개의 예외가 됨
 - 비밀 기록 및 비공개 정보와 관련한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

2) 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직렬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강화
 - 현재 자치단체별로 감사관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실효성을 갖지 못함. 본청 감사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만 생색내기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실적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 감사 후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
 - 술하게 실시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감사 후 시정조치요구 이행상황과 비위 공직자 사후 처리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

3) 재량권에 대한 외부통제 및 감시 장치의 강화

- 재량행위의 투명화

- 재량권의 축소가 아닌 재량권 행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그 행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패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
- 인허가, 지원·급부 등과 관련된 재량행위가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조사
- 주요사안·정책의 기록 작성 실태 점검
- 주요 국가정책, 외국과의 조약,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등에 대한 일련의 문서를 검토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기에 충분한 것인지 실태조사. 이를 토대로 관련 기록작성의 개선방안 제시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회의에 대해 회의록 생산 의무화 추진

4) 시민참여 수단의 확보 및 강화

- 지방 및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감시,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제도 도입 및 강화
 - 정보획득 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제도
 - 정부지출의 적법성·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감사기구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해 납세자(주민)소송 제도
 - 공익제보를 한 시민을 보호하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 환경, 건강위생, 고용, 증권 등의 경우 관련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명문화
- 사회복지위원회

1. 활동목표

- 제도개혁○캠페인○현안대응 등 운동방법과 내용의 다양화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이외 영역의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사회복지 지역운동 활성화에 기여

2. 주요 사업 계획

1) 분배구조개혁운동

- (가칭)경제사회협의회 구성 적극 제안
-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정 갈등구조를 넘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칭) 경제사회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2004년 6월 이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여기에서 다뤄져야 할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주장을 보다 본격화할 것임
-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운동 본격화
- 비정규노동자 확대와 차별로 인하여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일하는 빈곤층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 또한 비정규 관련 개악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비정규노동자의 수적 확대

나 차별을 온존하게 하는 제도변화 시도가 있음

- 비정규노동자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적극적인 권리구제, 현안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연대사업과 참여연대의 독자적인 사업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복지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적극 제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곤층이나 실업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임
- 공공·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호된 시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

2)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운동

○ 국민연금 제도개선 운동

-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운용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임
- 국민연금법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벌이고자 함

○ 기초연금 제도 도입 제안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조세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임
-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노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의제화 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운동의 지역화

○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

- 2005년부터 복지사업 중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예산편성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됨.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복지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수준이 복지수준과 직결되게 됨
-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시설 기피,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복지운동과의 적극적 연대

-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라 지역단체들의 복지분야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단체에 아동권 확보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운동 등을 제안하고자 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사업 목표

- 추상적 ‘민생’에서 시민의 구체적 권리찾기 운동으로
- 프라이버시권 운동의 본격화
-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의약품안전성 확보운동 돌입

2. 주요 사업 계획

1) 프라이버시운동의 본격화

- X-파일 공화국 vs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시민행동
 - 인터넷의 확산, 신용정보의 중요성 대두 등으로 정보인권이 시민의 중요한 권리영역이 됨
 - 의료정보, 신용정보, 유전자 정보의 보호 문제 등을 다소 산발적으로 다루어 왔으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운동을 벌이고자 함
 - 공공 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 정보의 상업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언론사 공동 캠페인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운동, 유전자DB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기, 위치정보 이용 확산에 따른 권리 침해 방지 운동

2)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

- 위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응
 - 항생제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감시 체계와 제도적인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위해한 식품과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 하고, 시민적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함
- 노인 틀니 등 필수적 치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 치아 건강은 신체 건강의 기본이 됨. 그러나 치료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노인 불건강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적자를 면치 못하던 건강보험도 흑자로 돌아섰고, 노인 틀니(의치) 등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혹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3)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 제안

- 정부가 부분적인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현재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부족함
- 보다 합리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통하여 소액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소해야 함. 이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평화군축센터

1. 사업목표

- 북핵, 한미동맹, 국방정책 등 외교안보현안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 제언
- 한미동맹에 대한 사회적 논쟁 촉발 프로그램 기획과 ‘우리 안의 미국’ 문제 제기
- 한반도 군축 프로세스 구체화 및 사회적 의제화 시도

- 회원확대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 실행위원회 정비 등 조직운영 안정화 및 체계화

2. 주요 사업 계획

1) 모니터 사업

- 북핵
 - 북핵사이트를 중심으로 기획토론, 기고, 논평 등 개입력 강화/ NPT 총회 모니터
- 한미동맹 재편
 -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모니터
 - 의원그룹, 시민단체간 정보네트워크 통해 대응
- 국방정책 및 군축
 - 국방개혁 현안에 적극적 개입
 - KMH 재추진 관련, 정부 및 국회 대응 집중
 - KMH 외 불요불급한 무기 구매 사업, 국방 R&D와 무기도입체계 모니터
- 북한 인권
 - ‘북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 확대
 - 유엔인권위 등 국제사회 논의 모니터
- 남북관계기본법
 - 핵심입법 과제로 설정, 집중 모니터
- 이라크 모니터
 -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기획사업

- 노무현 정부 2년 평가 외교국방 정책 개혁 의견서 발간
- 한반도-동북아 평화프로세스 마련
 - GPPAC 등 아시아 무력갈등 예방 의제 형성에 동참, 장기적 외교안보 의제 형성
 - 한반도-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워크숍 기획
 - 각 모니터 사업을 통해 전략적 의견서 작성, 한반도평화보고서2 출간
- 한미동맹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 한미동맹에 대한 합리적 토론 공간 확보. ‘한미동맹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개최
- 국방개혁 포럼 및 군축 프로세스 마련
 - 안보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국방개혁 포럼’ 운영
 - 남북한 군축 프로세스 개발 및 공론화 시도. 병력 감축 문제 중점 제기
- 이라크 파병철회 운동 기획
 - “미안해요 이라크” 일상적이고 차별적인 파병철회 집회 기획
 -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조명 시도

3) 평화연대활동

- 남북공동행사추진위 적극 결합
- 평화활동가 대회 공동 추진

○ 평택범대위, 복인권, 이라크과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연대활동

4) 평화교육

○ ‘분단 60년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강좌 개설

5) 조직운영

○ 센터운영 안정화 및 체계화

- 실행위원 보강 및 역할 분담 구조 확립

- 회원 확대 및 재정 자립 확보.

- 회원 간담회, 자원활동가 모임 등 회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국제연대위원회

1. 활동목표

○ 아시아 시민사회연대 적극 모색(권력감시와 민주주의 지원 분야)

○ 상근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획, 진행

○ 10주년 백서 관련 콘텐츠의 영문화를 비롯한 외국어 웹사이트 콘텐츠 강화

○ 국제연대위원회 조직강화와 독자 모니터 사업 추진

○ 2004년에 취득한 유엔 협의체 자격을 활용하여 유엔 차원으로 사업 확대

2. 주요 사업 계획

1) 아시아 민주화 지원

- 버마 민주화 지원을 위한 활동 개시

- 아시아의 민주주의 취약 지역 중심으로 연대하기 위한 기구인 ‘아태 시민사회 국제연대 (Asia Pacific Coalition for Asian Solidarity)’에 참여

- 참여연대의 유엔 협의체 자격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대 아시아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 전달과 감시 활동

- 해외공적원조기금(ODA) 모니터 사업 검토

2) 아시아 권력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활동 개시

- 아시아 각 국의 권력감시활동이나 정치개혁 단체 조사, 교류 시도

- 이를 위해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활동 영문 소책자 배포, 외국어 웹사이트 콘텐츠 강화

3) 적극적인 홍보 활동

- 일반 홍보물의 영어, 일어 웹사이트 구축 등 홍보매체 다양화

- 웹사이트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순히 사업 기사 올리는 것 외 기획기사와 과거 10년 자료 채취하여 자료실 기능 강화

- 계간지 ASQ를 대체한 연간 보고서 발간, 각 부서별 대표사업 수록

4) 상근자 국제 역량 강화

- 전체 상근자 대상 국제연대 워크숍 진행
- 국제연대 사업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제고
- 역대 대표 등 비중있는 국제연대 전문가 초청 강연회 연속 개최
- 한글 웹사이트 국제연대 자료실 이용 활성화
-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위한 사무처내 '활동가 해외연수를 위한' 목적기금 설치 검토

5) 유엔 협의체 자격 활용

- 유엔 인권위와 국제회의의 활용하여 한국 사회 주요 사안을 국제사회에 대변
- 아시아-북한인권, 한국 인권 등 유엔차원의 정책 결정 모니터링
-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활동 감시

6) 국제연대위원회 조직 강화

- 현재 자문기구에서 실행기구로 강화하고, 사업 분야별 전문가 충원
- 자원활동가 인원 대폭 충원, 교육 강화와 활동의 지속성 마련

2005년 연대사업 계획

1. 핵심 연대과제

- 국가보안법 폐지
- 해방60년 남북민간공동행사 추진
- 참여자치연대 발전방안 합의 및 기획사업

2. 주요 연대과제

- 사회적 협약기구논의와 분배 구조개선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이라크 파병 철수운동
- 북미 핵 갈등의 평화적 해소 및 북한인권
- 개혁추진력 강화를 위한 민중-시민사회단체 논의틀 형성

3. 관심 과제

- 언론개혁입법
- 테러방지법 저지
- 한미군사동맹 개편 및 기지이전
- 새만금 등 반환경적 대형국책사업 및 환경비상시국회의

- 도박산업 규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입법
- 행정수도 이전 후속조치와 지방 분권○자치 입법
- 과거사 청산
- 집시법 개정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 주거권, 건강권

2005년 부설기관 사업계획

참여사회연구소

1. 활동목표

- 포럼 및 심포지움의 구체성-실천성 강화, 활용도 배가
- 재벌프로젝트의 성과적 마무리와 삶의 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후속프로젝트의 안착
- 분과활동의 활성화와 학회 수준으로의 발전 모색
- 연구소 연구, 출판, 운영,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
- 참여사회연구소 장기발전 방향 마련

2. 주요사업계획

1) 포럼 및 심포지움

- 참여사회포럼
 - 2005년은 주로 ‘운동 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기하는 포럼을 기획, 이를 단행본 출간과 인터넷 업데이트 등 적극 활용할 계획
- 상반기에 국토 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2) 연구프로젝트

- 삶의 질 프로젝트 시행
- 기타 ‘시민운동 연구’ 등 프로젝트 개발 추진

3) 분과활동

- 지역정책분과
 -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기타 재개발·철거민, 노점상 등 도시 공간 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 준비
- 시민사회분과
 - 연구 성과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운동학회’의 창립을 모색

○ 재벌분과

- 2005년 상반기 중 재벌연구백서 출판

4) 재정

- 2005년도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거쳐 공익성기부금단체 등록 신청 추진
- 시민과 세계 재정 후원자 확충
- 장기 연구 프로젝트 발주

공익법센터

1. 사업 목표

-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모토로한 사법서비스 개선 운동 진행
- 공익법제 도입을 위한 시민행동 지속
- 변호사공익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활동
- 참여연대 공익소송자료실 구축 및 체계적 운영

2. 주요 사업 계획

-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캠페인
 -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법관행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 인지대 및 감정가 인하 운동,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 법조윤리 제고방안 마련,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 활동 등
- 집단소송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 진행
 - 입법로비, 공청회, 언론기획 및 기획소송 진행
-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활동
 - 변호사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발표
 - 사법연수원생 연수 프로그램 진행
 - 예비 법률가들의 공익의식 고취와 시민운동 입문 단계로 활용
 - 프로보노 어워드 제정 : 아름다운 재단과 공동기획, 연말시행
- 공익소송자료실 운영
 - 참여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소송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온라인 자료실 개설
 - 소송 현황이나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활용토록 함

안건 Ⅱ.

2004년 결산 및 2005년 예산안 승인

1. 전체 회계

- 2004년 결산
- 2005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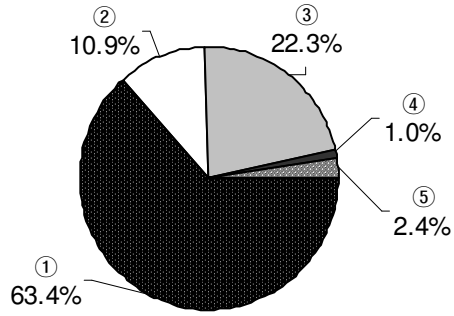
2. 부설기관 회계

- 참여사회연구소 2004년 결산
- 공익법센터 2004년 결산

1-1. 전체회계 - 2004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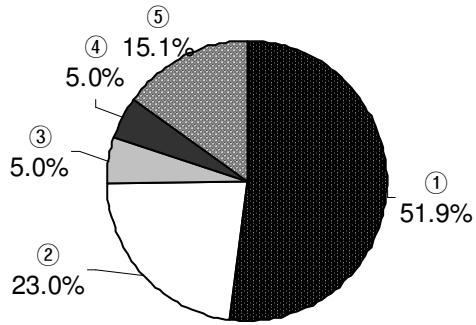
(단위 : 원)

수입	회비수입 ①	909,211,220
	사업수입 ②	156,635,240
	부정기후원금 ③	320,333,297
	정기후원금 ④	13,927,133
	기타수입 ⑤	33,927,320
	계	1,434,034,210



(단위 : 원)

지출	급여/상여금 ①	689,494,332
	사업비 ②	305,010,918
	부설기관회비등 ③	67,049,551
	건물관리비 ④	66,289,635
	기타 일반관리비 ⑤	201,075,351
	계	1,328,919,787



대차대조표1 (별도첨부)

대차대조표2 (별도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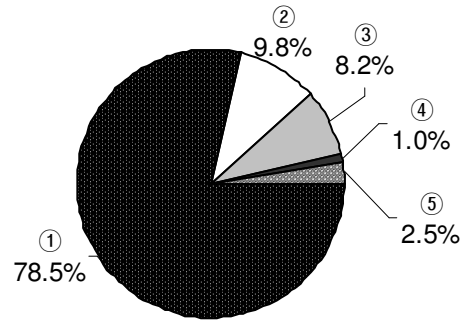
손익계산서1 (별도첨부)

손익계산서2 (별도첨부)

1-2. 전체회계 - 2005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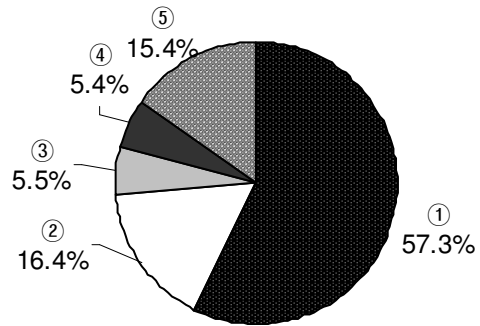
수입

회비수입	①	960,000,000
사업수입	②	120,000,000
부정기후원금	③	100,000,000
정기후원금	④	12,000,000
기타수입	⑤	31,000,000
계		1,223,000,000



지출

급여/상여금	①	700,000,000
사업비	②	200,000,000
부설기관회비등	③	67,000,000
건물관리비	④	66,000,000
기타 일반관리비	⑤	187,900,000
계		1,220,900,000



손익계산서- 2005년 예산안 (별도첨부)

2-1. 부설기관 회계 - 참여사회연구소 2004년 결산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대차대조표 (별도첨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손익계산서 (별도첨부)

2-2 부설기관 회계 - 공익법센터 2004년 결산

부설 공익법센터 대차대조표 (별도첨부)

부설 공익법센터 손익계산서 (별도첨부)

안건 Ⅲ. 임원인선안

2005년 임원인선안

※ 굵은 글씨 : 신임 임원

○ 공동대표

박상증(목사) 이선중(교무, 원불교 특별교구장)

○ 감사

서영철(회계사) 김영희(변호사)

○ 고문 (총 10명)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은정(교수, 서울대 법학) 안경환(교수, 서울대 법학) 양길승(녹색병원 대표) 오재식(월드비전 아태지역본부 북한사업부 부장) 유명중(수암건설 대표) 이삼열(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홍성우(변호사)

○ 자문위원 (총 55명)

강근환(前 서울신학대 총장) 강송식(한우물 대표) 팍진(교수, 상지대 한문학) 김덕수(예술인, 참여연대 홍보대사) 김만흠(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영준(LMG 대표이사) 김용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김우종(문학평론가) 김준영(목사) 김현(원불교 교무) 김홍남(이화여대 박물관 관장) 도정일(교수, 경희대 영문학) 문정현(신부) 박노해(시인, 나눔문화연구소 이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은주(김영사 대표이사) 박재일(한살림 대표) 박한춘(前 서울외신클럽 회장)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서경석(교수, 한양대 국문학) 세민(스님, 해인사 주지) 송두환(변호사) 신동식(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신영복(교수, 성공회대 경제학) 양용희(교수, 호서대 사회복지학) 양재혁(교수, 성균관대 철학) 오병철(제심관 관장) 오연천(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오충일(목사, 노동일보 대표) 우찬규(학교재 대표) 유순신(유엔파트너즈) 유중원(변호사) 유팔무(교수, 한림대 사회학) 이금룡(이니시스 대표) 이돈명(변호사) 이두식(교수, 홍익대 미대) 이신행(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 이정옥(교수,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지형(성균관대 명예교수) 이형진(아르케출판사 대표) 임옥상(화가) 임지순(교수, 서울대 물리학) 장명봉(교수, 국민대 법학) 장임원(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대화(교수, 상지대 교양과) 정용덕(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주식(변호사) 조상호(나남출판사 대표) 조순경(교수, 이화여대 여성학) 주섭일(내일신문 비상임 고문) 지광(스님, 능인선원) **김범주(교수, 교원대) 임현영(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최자용(성공회 사제)**

○ 운영위원회 (총 84명)

위원장 : 손혁재 (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부위원장 : 양윤재 (양전자시스템 대표)

○ 당연직 운영위원 (총 38명)

박상중(공동대표) 이선중(공동대표) 손혁재(운영위원장) 양운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동춘(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정책위원장) 박영선(사무처장) 김기식(사무처장) 장유식(협동사무처장) 이대훈(협동사무처장) 김남근(협동사무처장) 윤상철(협동사무처장) **성종규(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의정감시센터 소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박순성(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철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윤찬영(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근(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보공개사업단장) **윤대범(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김창준(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장) 이현욱(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남상철(공익법센터 소장 대행) 주중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전미연(회원모임 참종다)** 정을호(회원모임 막사밭) 맹행일(회원모임 시민운동공부모임) 박상표(회원모임 우리땅) **박영조(회원모임 청년마을)** 이명영(회원모임 어깨동무) 임주일(회원모임 산사랑) 조동문(회원모임 통일희망) **김철휘(회원모임 작은권리)**

○ 선출직 운영위원 (총 46명)

강양미(회사원) 강지혜(회사원) 기영상(개인사업) 기우봉(회원모임 산사랑 前회장) **김동훈(회사원) 김미정(교사)** 김상균(문화방송 프로듀서) 김서중(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영태(개인사업) 김원철(동전개발 대표이사) 김정수(회사원)** 김종복(시민운동공부모임, 사업가) 김준목(미래 MNB 대표이사) 김창남(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나경희(예가 대표) 박문식(회계사) 박상철(직장인) 박상필(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성준(움직이는 학교 대표) 박재우(교수, 한국외대 중국학) **박재홍(공무원)** 배삼희(변호사) 백천기(목사, 명동교회) 법안(스님, 금선사) **선미라(변호사)**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안철택(교수, 고려대 독문과) 오세중(변리사) **유영표(민주공제회 창립준비위원장)** 윤석인(前 한국자원봉사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윤주영(세무사) **이상미(주부)** 이선노(산사랑 회원, 인쇄업) 이은주(아름다운 사람들 필진, 주부) **이중권(교수, 동국대 수학과)** 이천용(의사) 이해숙(수필가) 임채성(교수, 건국대 경영학부) 전윤표(서울방송 라디오본부 부국장) **정찬휘(자원활동가)** 주동황(교수, 광운대 신문방송학) 최배근(교수, 건국대 경제학) **한규현(회사원)** 한면희(교수,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한명희(자영업) 한창규(법무사)

○ 집행위원회

위원장 : 차병직(변호사)
부위원장 : 김동춘(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집행위원

박상중(공동대표) 이선중(공동대표) 손혁재(운영위원장) 양운재(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직(집행위원장) 김동춘(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정책위원장) 박영선(사무처장) 김기식(사무처장) 장유식(협동사무처장) 이대훈(협동사무처장) 김남근(협동사무처장) 윤상철(협동사무처장) **성종규(협동사무처장)** 김상조(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의정감시센터 소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박순성(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현욱(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윤찬영(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근(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남상철(공익법센터 소장 대행) 맹행일(회원

모임협의회 회장)

○ 정책위원회

위원장 : 홍성태(교수, 상지대 교양과)

부위원장 : 한준(교수, 연세대 사회학)

○ 협동사무처장

김남근(변호사) 윤상철(교수, 한신대 사회학) 이대훈(평화운동가) 장유식(변호사) **성종규
(변호사)**

○ 사무처장

박영선 김기식

안건 IV. 정관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 1994. 9. 10. (제정)
- 1995. 3. 23. (1차 개정)
- 1996. 3. 13. (2차 개정)
- 1997. 9. 10. (3차 개정)
- 1998. 9. 27. (4차 개정)
- 1999. 2. 6. (5차 개정)
- 2000. 2. 19. (6차 개정)
- 2001. 2. 10. (7차 개정)
- 2002. 2. 23. (8차 개정)
- 2003. 3. 15. (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신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정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자문위원] 참여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8조

[정책위원회]

-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9조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30조

[활동기구]

-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처]

-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4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5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6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과 결산]

-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0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 개정 전후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p>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p> <p>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u>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의 선출</u> 4.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p><신설></p> <p><신설></p>	<p>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p> <p>-----</p> <p>-----</p> <p>-----</p> <p>-----</p> <p>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p> <p>-----</p> <p>-----</p> <p>3. <u>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u></p> <p>-----</p> <p>-----</p> <p>③ <u>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u></p> <p>④ <u>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u></p>
<p>제15조 [구성]</p> <p>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u>당연직 운영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②, ③ 생략</p> <p><신설></p>	<p>제15조 [구성]</p> <p>① ----- 정관에 정한 <u>당연직 운영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 29조 [정책자문위원회]</p> <p>① <u>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② <u>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u></p>

부록 : 희망과비전 보고서

희망과비전위원회

참여연대 희망과 비전 보고서 (2004. 9.)

희망과비전위원회

1. 설립취지 및 활동 개요

- 희망과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대 법학,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는 참여연대 10주년 기념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2003년 총회(2003.3.15)를 통해 구성되었다.
- 희망과비전위원회는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평가전략 사업’△참여연대 1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출판사업’ △참여연대 10주년에 즈음한 각종 행사 및 후원의 밤 등 기타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 위원회는 10주년 사업을 위해 산하에 △평가전략소위원회(위원장: 차병직) △참여연대 10년사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원순)를 두어 실무작업을 진행해왔고 △참여연대 장기발전기금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재정위원회(위원장: 이선종 공동대표)를 준비중에 있다.

2. 참여연대 10주년 사업

- 참여연대 10년사 1, 2 출간 사업
 - 10년사 1 : 10년 활동자료집 및 CD (2004. 9. 8 출간)
 - 10년사 2 : 참여연대 활동 자체평가 단행본(2004. 10월 출간)
- 참여연대 10년 희망과 비전 보고서
 -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장기 발전전망을 담은 보고서(2004. 9. 8 발표)
- 참여연대 10주년 기념행사
 - 참여연대 10주년 후원의 밤 : 2004. 9.8.
 -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참여연대 10년’ 평가 학술심포지움 : 2004. 9 .9
 - 10주년 기념 시민한마당 : 2004. 10. 16

3. 희망과비전위원회 구성

1) 희망과비전위원회

- 위원장 : 박은정(서울대 법학과 교수)
- 위 원 : 김 균 김기식 김남근 김상조 김수진 김연명 김호기 남상철 박상증 박순성 박영선 백승헌 손혁재 양윤재 윤상철 이대훈 이영희 임정근 임주일 임현영 장유식 조 국 조희연 진영중 차병직 최영도 최영태 하승수 홍성태 김중배 박원순 박호성 안경환 양길승 오재식 유명중 이삼열 장하성 조홍식 한인섭

2) 평가전략소위원회

- 위원장 : 차병직(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위 원 : 김 균 김기식 김남근 김상조 김수진 김연명 김호기 남상철 박상증 박순성 박영선 백승헌 손혁재 양윤재 윤상철 이대훈 이선중 이영희 임정근 임주일 임현영 장유식 조 국 조희연 진영중 최영도 최영태 홍성태

3) 10년사 편집위원회

- 위원장 : 박원순(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위 원 : 안경환 유명중 김중배 오재식 박상증 한인섭 양길승 박호성 조홍식 손혁재 이대훈 장하성 김호기 조희연 차병직 김기식 박영선 홍일표 이태호 이승희 이셋별 김은영 문혜진 김민영 김성희 박래균 권영준

4. 희망과 비전 보고서 작성 경과

1) 평가전략소위 논의 경과

- 제1차 평가전략소위 : 2003. 11. 16 - 희망과비전위 합동 회의
 - 평가 전망 총론 1차 토론 : 발제 - 김기식 사무처장, 조희연 운영위 부위원장
- 제2차 평가전략소위 : 2003. 12. 3
 - 총론 추가 토론 : 발제 - 김기식 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실장
- 제3차 평가전략소위 : 2004. 1. 26
 - 희망과비전위원회 제출 중간보고서 확정
 - 각론 1 - 상근자 복지 평가 전망 : 발제 - 박영선 사무처장
 - 10주년 재정사업안 검토 : 발제 - 김은영 총무팀장
- 제 4차 평가전략소위 : 2004. 4. 1
 - 총론 3 - 참여연대 장기 조직개편 방향 검토 : 발제 - 이태호 정책실장

- 제 5차 평가전략소위 : 2004. 5. 6
 - 각론 2 - 국제연대 평가 전망 : 발제 - 조희연 운영위 부위원장, 이태호 정 책실장
 - 10주년 기념 회원행사- 회원 의견수렴 계획 : 발제 - 안진걸 시민참여팀장
- 제 6차 평가전략소위 : 2004. 6. 4
 - 각론 3 - 권력감시운동 평가 전망 : 발제 -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 각론 4 - 지역조직사업 평가 전망 : 발제 -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론 5 - 회원 사업 및 회원참여 평가 전망 : 발제 - 이승희 기획실장
- 제 7차 평가전략소위 : 2004. 6. 28
 - 각론 5 추가 - 회원 사업전략, 회원참여 방안 : 발제 - 안진걸
- 제 8차 평가전략소위 MT : 2004. 8. 5~6 전북 무주 자연환경수련원
 - 각론 6 - 분배구조개혁운동 평가 전망 : 발제 - 문혜진 사회인권팀장
 - 각론 7 - 세계화 대응 검토 : 발제 - 이승희 기획실장
 - 희망과 비전 보고서 -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전망(초안)' 검토

2) 회원 토론회

- 제1차 회원 대토론회 - 참여연대 활동 평가 전망, 2004. 6. 30 느티나무
 - 사회 : 차병직 집행위원장 / 발제 : 이태호(정책실장)
 - 지정토론 : 박상표(회원)/이상미(회원)/김중복(회원)/장홍백(간사)/조희연(임원)
 - 참석자 : 회원 100여명
- 제2차 회원대토론회 - 회원참여 평가와 전망, 2004. 7. 30 느티나무
 - 사회 : 손혁재 운영위원장
 - 토론 : 안진걸(시민참여팀장)/김철희(회원)/박상규(회원)
 - 참석자 : 70여명

3) 설문조사

- 회원설문조사
 - 2004. 6. 30~8. 27 총 939명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 설문에 응답하여 회신된 자료를 분석
- 간사/임원 설문조사
 - 2004. 7. 1~8. 5 간사 42명 임원 31명
 - 간사는 현직간사, 임원은 현직임원 중심으로 실행위원 포함, 고문·자문위원은 제외

4) 희망과비전위원회 주요 의사결정 회의

- 1차 회의 : 2004. 11. 16
 - 희망과비전위원회 상건례/산하위원회 위촉/평가총론 토론
- 2차 회의 : 2004. 2. 25
 - 평가전략소위 중간보고 후 토론/10년사 기획 확정 등

○ 3차 회의 : 2004. 8. 26

- 희망과비전보고서 초안 검토 및 승인(운영위원회와 합동회의)

참여연대 희망과 비전 보고서

2004. 9.

참여연대 희망과비전위원회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기념사업을 위해 2003년 제 9차 총회에서 발족한 희망과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향후 장기발전 전망 마련을 위해 산하에 평가전략소위원회(위원장 : 차병직)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이후 총 8회의 토론과 회원공청회, 회원 간사 임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I. 90년대 한국사회와 참여연대 10년

1. 참여연대 10년 활동 개괄

○ 창립 정신 : 창립선언문 요지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절감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이제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과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 참여연대 10년 주요 활동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 집단소송법 제정운동

○국민생활최저선 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4대 사회보험 개혁운동

-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내부고발자 보호운동
- 낙선운동 2000, 2004
- 재벌 변칙상속 과세촉구 운동 : 국세청 앞 1인 시위
- 사법제도 개혁운동 : 검찰개혁, 법원 개혁, 사법비리 근절운동 등
- 작은권리찾기 :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 등
- 민생입법운동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등
- 정보공개운동 : 관공비 공개, 국가회의록 기록물 공개운동 등
-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및 대선자금 감시운동
- 생명윤리법 제정운동
- 아파트공동체 운동
-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 참여연대 10년 주요 기록
- 입법청원 110건
- 공익소송 및 고발 195건
- 정책토론회 300여건
- 2004년 7월 13일 현재 회원수 13,321명
 - 참여연대 역대 회원수(1994년 ~ 2004. 06. 09 23,417명)

2. 참여연대 운동의 특징

- 90년대 시민운동의 조건
 - 90년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가 난관에 봉착했던 시기
 - 선거 등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시민, 대중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됨
 - 개발독재,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분배정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분출
 - 정치권, 관료집단에서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였으나 이를 제도정치의 힘만으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
 - 대중들의 변화의 열망은 고조되었으나 기존의 사회운동이 그것을 충분히 조직화, 수용하지 못하여 새로운 사회운동 노선이 모색되었음
 - 각계각층의 권리의식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었으나 시민이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정착, 이를 수용할 정치세력 부재
 -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색됨
- 참여연대 운동의 특징
 - 참여연대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권력감시 단체로서, 개혁적 진보적 입장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또한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운동성의 결합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대안제시 등 실사구시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 권력감시 주체로서의 자립성과 일관성을 증시해 왔음

3. 참여연대 운동의 성과

- 사회개혁을 가능케 하는 시민의 힘을 입증
 - 사회적 의제형성 기능, 시민의 정책개입과 대안제시 능력 확인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구호는 점차 시민운동 공동의 출사표가 됨

- 개혁의 제도화와 법치의 정착에 기여
 - 권력부패-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된 공정성·형평성 회복에 기여
 - 사문화된 시민권리의 발굴, 입법운동 등 미비한 제도의 도입

- 다양한 시민운동영역과 권리주체의 발굴
 - 권력부패 근절, 사법정의, 정치개혁, 재벌개혁, 기업투명성 확보, 국가복지 실현, 예산낭비방지 등 다양한 시민운동영역을 개척
 - 유권자, 납세자, 소비자, 소액주주, 공익제보자, 사법피해자 등 유명무실했던 이 땅의 권리 주체들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음

- 창조적 시민행동 수단과 양식 개발
 - 공익소송 집단소송, 입법청원과 공익로비, 1인 시위, 주주대표소송, 낙선운동, 고위공직자-판검사-정치인 인물D/B와 인사평가, 정보공개운동, 내부고발자 지원, 시민합의회의, 유권자위원회 등

- 회원의 힘으로 자립재정 실현
 - 공익펀드가 부재한 한국의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 충당

II. 전환기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참여연대

1. 2000년대 시민운동의 조건 변화

- 참여민주주의, 불완전한 정착
 - 시민권리의식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법치주의와 시민참여 풍토 역시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그러나 정치, 사법, 주민자치, 행정 등의 개혁이 지체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최근 수년간 나타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진출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토대가 확고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경제적 갈등의 심화
 - 97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의 불안정성 심화, 빈곤층 증가, 소득 불균형 확대 등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반면,
 - 재벌개혁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적 개혁은 지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냉전체제의 해소, 남북-한미관계의 전환
 - 6.15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는 등 냉전분단체제가 해빙을 맞는 한편,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드러나고 있음
 -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주변국의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미핵 갈등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음

- 지역과 지구적 범위의 시민행동 과제의 대두
 - 시민참여공간으로서 국가 외에 지방, 지역(아시아), 세계가 대두
 - 중앙집권에 대한 분권·자치·균형발전의 문제제기가 확대됨
 - 냉전개발시대의 국가주의, 안보지상주의와 개발지상주의에 맞서는 생명, 평화, 지속가능성이 의제화되는 한편,
 - 지구적 차원의 남북갈등과 군사화에 대한 시민행동이 확대됨

- 사회적 갈등구조의 다변화와 시민사회의 분화
 - 90년대가 주로 정치사회·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라는 단선적 갈등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시장·국가(정치)·분화된 시민사회 집단들 간의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2. 참여연대 운동의 한계

- 종합형 운동의 한계
 - 이슈 대응 위주, 집중력과 전문성의 한계
 - 전체 참여연대의 성과에 비해 각 활동기구의 발전 제약

- 대변자형 중앙권력감시 위주 운동의 한계
 - 대변자적 운동의 성취에 비해 회원·시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및 참여 부족
 - 중앙정부 권력감시에 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분권, 분산, 주민자치 등의 과제,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과제 대응에 한계

- 정치개혁 등 권력감시 외 구조개혁 미흡
 - 정치개혁, 반부패 등 절차적 민주주의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갈등 해소에는 역부족

- 정치사회 비판에 비해 시민사회 내부 모순과 갈등에 대한 비판 제한

○ 제도화, 가시적 성과 위주 활동의 한계

- 대안과 성과를 중시한 것이 참여연대 성장동력이었으나

-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특정이슈에 대한 능동적 연대 제한

Ⅲ.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 비전

1.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 5대 비전

○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심화와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 권력감시는 참여연대 출범의 기본정신이자 핵심과제

- 사법, 의정, 행정 전 분야에서 모니터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물샐틈없는 시민감시의 그물망을 형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 확대 강화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을 권력감시운동에 버금가는 중심사업으로 전개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시민행동의 본격화

- 평화로운 한반도와 상생의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을 본격화

- 국방안보 등 시민참여의 영역에 참여민주주의 실현

○ 국경을 넘어서는 참여와 연대

-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민참여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음

- 아시아 연대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활성화

○ 자율화·전문화, 쌍방향 시민참여의 확대

- 각급 활동기구의 자율성을 배가하고 주요 활동부문을 단계적으로 분권화

- 참여연대가 쌍방향 시민실천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온라인 회원의사결정, 활동분야별 시민참여, 사회교육 공간을 확대

2. 새로운 10년을 위한 4대 실천 방향

○ 참여연대의 사회적 역할 확대 Project

- 권력감시기능 전문화·안정화
 -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개혁 주력
 - 평화군축운동 본격화
 - 아시아 및 국제 연대 활성화
- 자율화 전문화에 기초한 분권 Project
 - 활동기구를 권력감시/사회인권/평화 등으로 특성화 계열화
 - 준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3-5개 사무처급 분권화
 - 부설기구·유사기구의 효율화와 정비
 - 시민참여 사회교육 강화 Project
 - 의사결정 공개 확대, 의사결정 쌍방향성 확대
 - 활동부서별 회원 가입 확대와 부서회원 서비스 확대
 - 시민·청소년·활동가 사회교육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 재정 안정화 Project
 - 목적형 기금 다양화 : 건물·상근자복지·활동영역별 기금 등
 - 정기 후원회 외에 목적형 기금의 일상적 모금 추진
 - 재정위원회 상설화 : 적극적 재정사업 기획

IV. 새로운 10년을 향한 중기 실천계획

1-1. 권력감시 전문화 안정화

- 대상 활동기구
 - 의정감시센터·사법감시센터·맑은사회만들기본부·공익법센터
- 실행 방향
 - 특정제도 관철 수준 → 일상적 정책모니터와 대안제시
 - 의정 데이터 베이스 주력 사업화
 - 사법감시 기능 강화, 투자 확대
 - 반부패 제도개혁 운동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개혁 모니터

1-2.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경제개혁 주력

- 대상 활동기구
 - 사회복지위원회·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조세개혁센터·경제개혁센터
- 실행 방향

- 복지제도 개선 위주 → 분배-재분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
- 기존 활동단위의 통합성 강화와 역할 재배분
- 사회복지위원회 : 복지 제도 정책 모니터를 위주로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 영역 확장
-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한시적 논의기구)

1-3. 평화군축 운동 본격화

○ 대상 활동기구

·평화군축센터·국제연대위원회

○ 실천 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교류협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외교안보권력 감시, 평화군축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 평화교육 콘텐츠 구축, 청년 평화활동가 육성
- 한미관계 전면 재검토 TF 구성

1-4. 아시아 국제연대 활성화

○ 대상 활동기구

·국제연대위원회·각 활동기구

○ 실천 방향

- 아시아 권력감시, 평화운동 등 연대 강화와 인적투자 확대
- 아시아 민주화운동 연대를 위한 TF 구성
 - 버어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 민주화 인권 이슈 지원 강화
- 국제무력 갈등, 세계화 관련 대응 국제연대 강화
-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기구화

2-1. 자율화·전문화

○ 대상 기구

·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 및 각 활동기구

○ 실행 과제

- 권력감시, 사회인권, 경제개혁, 평화통일 등으로 특성화 계열화
- 1단계 운영 자율화 --> 2단계 사무처 구성의 단계적 자율화
- 활동기구 회원제, 전담후원제 등 재정독립구조 형성
- 사무처의 집권적 운영을 상임집행위 중심의 협의적 구조로

2-2. 부설기구 및 유사기구 효율화와 조직정비

○ 대상 기구

·정책위·참여사회연구소·참여사회아카데미·공익법센터·시민과학센터

○ 실행 과제

·정책위원회 역할 및 기구 재편 여부에 대한 재검토

·참여사회아카데미 재활성화

·참여사회연구소는 전문화, 안정화, 특정 연구기능 강화

·공익법센터, 시민과학센터는 활동기구 수준의 활성화 여부 타진

3-1. 회원관리 참여구조 개선

○ 실행 과제

·재정자립 100% 프로젝트, ‘우편물 반송 0(제로)’ 프로젝트 실행

·상임집행위 회의자료 회원 공개 등 의결사항 공유 확대

·참여연대 주요사안에 대한 우편 온라인 투표

·인터넷 총회, 인터넷 회원마당 등 온라인 회원참여행사 추진

·지역회원 사이버 커뮤니티 결성 적극 지원 및 지역 순회

·부서별 회원제의 단계적 확대

·활동기구별 인터넷 콘텐츠의 개발 : 참여형 모니터 프로그램 등

3-2. 사회교육 기능 강화

○ 실행 과제

·10주년 백서 사업을 계기로 참여연대 아카이브 구축

·인턴 제도의 현실화,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활동가/학생·청소년/시민교육 분야 콘텐츠 개발

·모델 사업 개발을 통한 교육 아이템의 단계적 확장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실현

4. 재정안정화

○ 실행 과제

·회원회비 중심원칙은 유지하되 일상적 재정사업 추진

·정기 후원회와는 별도로 목적형 모금활동 일상화

- 건물기금 모금 추진하되 신축 여부는 신중히 판단
- 활동분야별 특정 재정소요에 대비 목적형 기금 - 전담후원제
- 적극적 재정사업을 위한 재정위원회 설치
- 상근자 복지기금, 연대기금의 목적기금 용처 개발 및 지출 확대

V. 참여연대 희망과비전실행위원회

1. 참여연대 희망과비전실행위원회

- 임무
 - 희망과비전보고서의 기본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입안
 - 실행계획에 따른 실무조직개편 및 각종 TF, 신규인력소요 판단
- 구성 : 상임집행위원회로 대체(실행위원장 박영선 사무처장)
- 활동기간 : 2004. 9 ~ 2005. 9

참여연대 기구표

